

제355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18년1월18일(목)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가상화폐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
2.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논의 관련 현안보고

상정된 안건

1. 가상화폐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 1
2.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논의 관련 현안보고 1

(09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용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정무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매우 광범위하고 민생 및 국가경제에 직결되는 기관들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15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 가상화폐에 대한 이례적인 자금 집중, 그에 대한 규제 공백 등의 금융 현안, 공정위의 진속고발권 폐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기능의 소관 부처 결정 문제 등 정무위원회가 풀어야 할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생산적이고 원만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우리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주신 이진복 전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가상화폐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
2.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논의 관련 현안보고

(09시36분)

○위원장 김용태 의사일정 제1항 가상화폐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논의 관련 현안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대응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가상통화 대응에 관해 현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가상통화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개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가상통화의 종류는 2009년 1월 최초의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약 1440여 종이 있고 국내에는 약 120여 개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운영 중인 가상통화 거래소는 약 37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가상통화 국내 시세는 현재 비트코인 기준으로 약 1250만 원 수준입니다. 금일 기준으로 국내 가상통화의 1일 거래규모는 약 58억 불 수준으로 전 세계 1일 거래규모의 약 19.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쪽, 문제점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서 투기분위기에 편승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투기과열로 경제·사회적인 부작용도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4시간 거래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이고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가상통화 거래의 익명성을 악용한 자금세탁 문제도 심각합니다. 아울러 거래소에 대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상통화 대응 및 주요 대책 내용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가상통화의 동향 및 주요국의 규제현황 등을 검토하면서 국내 거래소의 거래투명성 확보, 소비자보호 조치 그리고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지난 12월부터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서 부처 입장 등을 조율하면서 관련 긴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주요 대책 내용입니다.

먼저 가상통화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입니다.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그리고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의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세조작 등 거래소의 불법행위 조사를 위해서 현재 검경, 금융 당국 합동으로 조

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불법환전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상통화 거래소 약관의 불공정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체 직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공정 약관 사용 판단 시에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가상통화 거래 과열에 대한 대응입니다.

본인 확인 없이 가상통화 거래계정으로 방만히 활용돼 왔던 가상계좌를 통한 신규 가입은 이미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거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이미 발표한 바 있고 1월 말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서비스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실명확인을 통해 외국인,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신규 진입을 차단하겠습니다. 투기과열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등을 하지 않도록 한 바가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에 관해서도 현재 금융위·금감원 중심으로 합동 점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월 중 배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 유출·해킹 우려 등에 대한 대응입니다.

먼저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ISMS 인증 의무 대상임을 통보하고 조속히 인증 이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거래소 보안조치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이미 실시하였고 범위 위반 사항이 나타날 경우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하나인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거래소 규제와는 별개의 것임을 명확히 하고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는 가상통화의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거래자의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왔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투기과열

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기·시세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가고, 비정상적인 투기 진정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논의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안보고는 금융시장의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모두 관여하게 됨으로써 예상되는 금융정책에서의 혼선과 부작용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정부의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존경하는 김용태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입장과 견해를 위원님들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때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지정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크게 제약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의 인사·조직·예산에 대한 통제는 물론이고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금융감독원장 해임 요구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통제는 내부 경영에 대한 관여 차원을 넘어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금융회사 감독·검사, 소비자 보호 등 업무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임원의 임기와 해임사유를 등을 명시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기도 합니다.

둘째,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를 권고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습니다.

셋째,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이 없는 중복규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예·결산 승인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감사원 또한 금융감독원의 내부 경영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예·결산서의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 금융위원회 내의 분담금관리위원회 신설 등 금융감독원에 대한 통제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정을 통한 기획재정부의 추가적인 통제는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에 지나지 않으며, 금융감독원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큰 틀이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병행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편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으로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임직원 모두는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또한 공공기관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양충모 공공정책국장도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

립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관련 각 당 간사님들과 논의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말씀을 토대로 현재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무위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정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국회의장님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 배부해 드리는 의견서는 여야 간사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관련 정무위원회 의견서

기획재정부가 최근 검토 중인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다음과 같이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 및 관치금융의 폐해 야기 등이 우려되므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되는 것은 서두를 일이 아니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첫째,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최근 강화된 외부통제장치와 중복규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2017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는 금융감독원 예·결산서의 국회 보고,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신설 등 금융감독원에 대한 외부통제장치를 새로이 도입한 바 있습니다.

셋째, 금융위 설치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간 상충에 따라 행정행위에 의한 국회의 입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부처의 일개 행정행위가 법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국회법상 상임위 소관주의에 위배됩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등 외부통제장치 도입 문제는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담아서 국회의장님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이학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오늘 급하게 정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당만 보더라도 많은 위원님들이 기존의 일정이 많아서 참석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급하게 일정을 바꿔서 나오게 돼서 국민들 보기에 미안한 지경이 됐습니다.

오늘 열리는 정무위원회가 급했다라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열렸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사 협의 없이 의사일정을 김용태 위원장께서 단독으로 결정해서 회의가 오늘 열리게 되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013년부터 제가 정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간사 간 협의 없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국회법 49조2항에 따르면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간사 위원들에게 2일 전인 16일에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의사일정을 급하게 알려왔습니다. 현재 국회(임시회)가 폐회 중임을 감안해서 1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일정에 맞추어 본회의가 개최되는 1월 말 또는 2월 첫 주에 전체 정무위원이 참석해서 내실 있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일정 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청과 상관없이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도록 하게 된 데는 그동안 우리 상임위가 존중해 왔던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오전에만 진행되는 회의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될지도 의문입니다.

국회가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무위는 12월 정기회 중 비트코인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각 정당별로 토론회가 개최 또는 예정되어 있고, 2월 초에는 입법조사처와 3당 간사 위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소속 정당 입장을 넘어서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향후 의사일정 확정 시에는 간사협의 결과를 존중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태** 이학영 간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조금 있다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새해 들어서 올해 첫 번째 열린 정무위원회입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학영 간사님께서 여당의 간사님으로서 또 정무위원회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신임 정무위원장님으로 오신 김용태 위원장님 오셔서 첫 번째 열리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많은 불신과 또 의혹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 건수만 보더라도 가히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3당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우리 정무위원회의 그런 관례와 또 좋은 그런 관행들이 이 일로 인해서 훼손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좀 일찍이 여야 간에 따질 것 없이 함께 의논을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먼저 짚었더라면 하는 그런 저 스스로의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여당이 먼저 이것은, 야당이 먼저 이것은……

국민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고 또 현재 정부 정책의 혼선을 가중시켜서 엄청난 어려움들이 산적해져 가는 이런 상황에 위원장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이번에 가상화폐 부분과 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 또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오늘 국무조정실장이 함께 참석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심도 깊은 의논들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되고, 우리 이학영 간사님께서 너그러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실 것을 야당 간사로서 한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태** 우리 박선숙 간사님께서도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오늘 저희가 논의하는 가상화폐 관련 안건이나 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안건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오늘 회의는 가능한 빨리 열렸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학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의에 이르러 회의가 개최되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국회법 제52조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회는 할 수 있지만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위원님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러 분 참석하셔서 또 국무위원들께서도 참석하셔서 개회 이후에 오늘 정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신데 대해서는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김용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의 개최를 위한 원활한 협의가 있지 못했다는 점 위원장으로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과 말씀 드립니다.

다만 현안 자체가 워낙 급박하고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에 대해서 우리 이학영 간사님과 여러 정무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주질의 5분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상임위의 첫 질의자가 돼서 영광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상화폐라고 일단 쓸게요. 지금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과 형국을 보면 저는 이런 게 연상이 됩니다. 불이 났어요, 불이. 화재가 났어요. 불 끌 때 어떻게 꺼야 되는지 혹시 들어 보셨어요, 소방관들한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불이 났는데 소화전을 한쪽에다 막 갖다 대요. 그리고 수

압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 불이 꺼집니까? 혹시 아세요, 그런 것? 산소를 없애는 게 소화작전입니다. 불이 났을 때 한쪽 방향으로만 대면 그 불은 더 커져요. 저는 그런 형국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응방식을…… 문제점은 잘 나열한 것 같습니다. 잘 나열했는데 그 불을 끄는 데 있어 가지고 대책을 너무 한쪽 방향에서 수압을 높여 가면서 하니까 이런 반발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지금 코스닥에는 얼마나, 몇 개 기업이 등록돼 있는지 모르시지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거래소요?

○정재호 위원 코스닥. 그건 이렇습니다.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코스닥의 일중 거래량이나 하루 거래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줄면 가상화폐 거래가 늘어나고 코스닥이 늘어나면 가상화폐 거래가 줄고 이런 상황이지요.

결국은 지금 투자가 숫자가 한 300만 명 된다고 그러지요, 실장님? 우리 이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투자가 숫자가 한 300만 정도……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한 200만 명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200만~300만.

이 사람들 코스닥 시장이나 가상화폐를 들락날락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가상통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투자라기보다는 현재 투기적인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의 대응방식이 너무 급했다, 종합적이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요. 이런 게 공론화 안 되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농협에 전산사고 났을 때 북한 소행몰이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런 말들이 안 나오는 게 어찌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는 이 국면에서 다행스러운 것 같은데 실제 그런 논리가 나오면 대응할 수 있는, 실상을 좀 파악해 놓으세요.

그리고 법무부로부터 시작한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대응 이게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을 언급했지만 오히려

이것 일종의 마켓 아닌가요? 시장으로 봐 주고 금융위가 소프트랜딩하게 좀 가져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답변하시고요.

금감원장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발단이 왜 됐습니까, 감사원 감사?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것 예산 통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입법이 됐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예.

○정재호 위원 예·결산 국회에 보고하고 분담금관리위원회 신설했으면, 이 정도면 되지 마치 이것도 큰일, 금감원을 없애야 될 기관같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이유가 없지요?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 통제를 하자는 것 좋은 이야기인데 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되지 공공기관 지정을 굳이 또 해 가지고…… 이게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의견을 제대로 좀 내십시오.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시간이 얼마 없는데 금융위원장님,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KT&G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금감원장님도 기억나시지요?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예.

○정재호 위원 KT&G가 인도네시아 트리사티(Trisakti) 투자에 문제가 많다 그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 또 지금 KT&G 관련해서 언론기사가 최근에 연일 나오더라고요. 두 분 다 한번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KT&G의 1대 주주가 어디입니까? 국민연금입니다. 2대 주주는 IBK기업은행입니다. 민영화된 공기업 중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정말 일탈행위가 너무 심해요. 우리 금융위에서 지배구조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민영화된 공기업들 지배구조 잘 들여다보시고. 왜 1대·2대 주주가 이 기업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트리사티 담배회사 인수하면서 빚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했는데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공기업

이 민영화되고 지배구조 개선해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 완전히 마무리는 되지 않았지만 조사 진행 중이고요.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이중장부 작성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세금 납부를 위한 장부 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또 채권에 관한 액수와 자산보다도 적은 것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혐의는 못 밝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가상통화 관련해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정부 대응에 있어서 대응 방향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냐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도 사실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무부의 의견과 금융위의 의견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들을 저희가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 내부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와 같은 논의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중에서 제기되는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대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KT&G 지배구조, 금융위원장님 한번 말씀을……

○**금융위원장 최종구**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감독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으로 우선 같음하고 저도 혹시 더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좀 중점적으로 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원장 최종구** 지금 금융위뿐만 아니라 법무부, 총리실 주재하에 같이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바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상욱 위원** 오늘 현안보고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일단 자리가 됐기 때문에 여쭙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어저께 한국일보 단독 기사를 보면 지엠이 본사 차입금 10억 불, 그러니까 1조 619억 원을 정부가 대 주면 한국지엠에 신차 물량을 배정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정부한테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것 저는 못 들었습니다.

○**지상욱 위원** 못 들으셨어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제가 그 기사는 읽지 못했습니다.

○**지상욱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이런 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내용이 한국지엠이 자본잠식됐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얘기인데 지난번 국감 때도 제가 그 자본잠식이 허구다, 원가비율이 94%이고 우리나라 완성차 4대사의 원가별 평균 하면 80%이기 때문에 2조 적자라고 하는 것이 94%를 80%로 역으로 치환해서 계산하면 3조 정도 순이익이 난다고 그때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정부가 그것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신차 물량을 배정할 테니까 1조를 정부보고 대라고 이렇게 강짜를 부리고 있는데, 내용을 모르시면 파악해보시고 어떻게 할 건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알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우리나라가 봉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지상욱 위원** 그다음에 여기 게시는 국무조정실장님,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블록체인 기술이 몇 가지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일단 블록체인 기반기술은 제가 보기에는 대개……

○**지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가지나 된다고 알고 계세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가짓수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상욱 위원** 모르시지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지상욱 위원** 그러면 그 가짓수에 따른 각각의 특성도 모르시지요? 일부만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지상옥 위원 금융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하시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지상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 있는 주무부처의 당국자분들께서 그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폐지를 검토한다, 선물거래 금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국민들한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이해도가 높지 않은데 더욱이 법무부가 주무부처인 것처럼 이 제도와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데 우리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자존심 안 상하십니까? 법무부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금융위원장이 좀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부처가 맡은 일을 같이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아무래도 사기 같은 범죄피해 예방 쪽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계좌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을 통한 어떤 과열 방지 이런 쪽에서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상옥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412억을 암호통화거래소에 투자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기사로 봤습니다.

○지상옥 위원 기사 보셨어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지상옥 위원 금감원장님,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그런 첩보가 있는데 그것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알고 계세요?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예, 통보받아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상옥 위원 확인되셨어요?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지상옥 위원 아니, 그런 사실이 있기는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예.

○지상옥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참 우스운 얘기인데요, 12월 28일 날 금감원장님은 ‘가상화폐 열풍은 거품. 내기해도 좋다’고 그래서 폭락했다가 다시 상승했고요. 1월 12일 날 법무부장관이 ‘거래소 폐쇄 특별법 추진하겠다. 정부 조율이 끝났다’ 그래서 또 20% 폭락했고요. 그다음에 7

시간 뒤에 청와대는 ‘그런 일 없다’ 그래서 다시 상승했고요. 그저께 김동연 부총리가 ‘거래소 폐쇄 옵션 살아 있다’ 그래서 또 20% 폭락했고요. 그러니 그렇게 발표할 정부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충분히 내부자거래로 정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개미의 등을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1분만 더……

○위원장 김용태 예,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세요.

○지상옥 위원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금감원장님 또 법무부장관님, 부총리, 청와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개미는 정말 등골이 휘고 그 와중에 정부는 투자를 하고 정부의 공직자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안 것처럼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금감원하고 FIU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검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상계좌 점검을 끝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들었는데, 이 조사를 통해서 불법자금 유통, 증여세 탈루 같은 혐의가 나오게 있습니까, 원장님?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사에서.

○지상옥 위원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알려 주시고요.

정부가 개미의 등을 치고 있다, 국민이 울고 있다, 오락가락하고 있다, 철학도 지식도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답변을 잠깐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상옥 위원 예.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에 블록체인 기반기술이 몇 개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블록체인 기반기술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기보다는 이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이용한 가상통화가 1000종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반기술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기반기술 R&D 투자를 확대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이용해서 금융권에 적용된 한 사례가 가상통화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이번에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은

가상통화의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부거래 관계는 제가 아는 한 공무원 한두 명의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고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일단은 공무원들은 투자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달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용태** 예, 말씀하세요.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아까 말씀해 주신, 제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서 본질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많은 거품이 있고 그런 상황들을 기자간담회나 이런 데서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긍정을 안 하시고 자꾸만 얘기를 하셔서 제가…… 특히 한국에만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것에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거품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다가 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표현에서도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제된 표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금융감독원과 FIU와는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것을, 지금 불법거래가 없는가 하는 것을 체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일단 은행에 가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태** 다음 질의에 앞서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나 확인을 해 볼게요.

지상욱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국무조정실장이 하셨는데 만약에 가상화폐 관련 공무원의 내부거래, 특히 지금 여러 차례 정부의 발표 때문에 폭락하면서 이것이 선물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본다면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공무원들이 개입을 했다, 특히나 시세 정보를 통해서 그랬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처리하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태** 예.

○**금융위원장 최종구** 지금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알려지고 있는 법무장관의 발언이나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은 일부러 발표한 게 아니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러한 발언들을 예상하고 미리 매도를 했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잠깐만요. 30초만, 잠깐만요.

○**위원장 김용태** 예, 1분.

○**지상욱 위원** 금융위원장님, 지금 하신 말씀이 저는 정말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발표한 게 아니라 질문에 답을 했다,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준비되지 않은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시세조정……

아니, 일부러 발표를 했던 기자들이든 누가 질문을 했던 정부의 책임을 지는 분의 입에서 나온 중차대한 그런 발언들이 시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의도해서 발표해야만 시세에 영향을 미치고 의도하지 않고 갑자기 다가온 질문에 답변하면 문제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아닙니다, 위원님. 제 말씀은 그러한 발언이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한 발언이 발표로서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이 미리 팔았다든지 그러기는 어려울 거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상욱 위원님,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다 지적해 드려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김선동 위원** 질의시간에 해야 할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김선동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감원장께서도 소속 기관의 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먼저 매도 조치를 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융위원장님 말씀은 사실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런 발언 때문에 그랬다기보다

는 내부의 흐름을 직원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 김동연 장관의 발언 시점이나 전후관계나 맥락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 기관의 판단을 알고 있을 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내부적으로 활용을 해서 자신의 자산관리를 하는 데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또 외부에 유출됐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지적합니다.

○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다음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경 위원 금융위원장님, 거래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다 하셨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거래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 저희 금융위원회 FIU하고 금감원이 한 것이 거래소에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6개 은행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일부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금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곳에는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개념이 막 혼동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문제는 그것대로고, 사실 지금 거래소가 블록체인 기술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거래소 자체가……

○제윤경 위원 ‘거래소에 대해서 폐지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의 향후 미래 전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같이 섞여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는 나름 다른 문제의식이 있었을 텐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는 게 가상통화 거래소를 다 폐지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고려를 하신다는 입장이신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윤경 위원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폐지하겠다’ 입니까, 아니면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는 폐지까지도 검토하겠다’ 이 입장을 정부가 갖

고 있는 건지 이게 불분명한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아직 협의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안에는 그것들이 다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윤경 위원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제윤경 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 두 가지를 다 전제한다 그러면 시장의 혼란이 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어쨌든 거래소를 양성화해서 실명제 애기도 했었고, 그러다 갑자기 거래소를……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그래서 투기뿐만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도 양산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일부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전제하에 실명제 등을 통해 거래소에 있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거래소 다 폐지할 수도 있는데 현재 실명제를 통해서 관리하겠다’ 이러면 사실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그러니까 지난 12월 28일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에도, 그때 발표할 때도 법무부 안에는 거래소를 전체적으로 폐쇄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행법하에서 우선 이런 과열 투기라든지 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제윤경 위원 일단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려야 돼서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정부는 그것은 교통정리를 확실히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시장의 불법행위 엄단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시장이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폭등과 폭락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입장을 분명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법무부가 주무 부처가 된 데는 거래소의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시장 이런 무게중심으로 정부가 바라보기보다는 불법행위, 투기 이런 것에 조금 더 심도 깊게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다른 사안이기는 한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KEB하나은행 관련해서 회장의 연임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에 김정태 회장이 사실상 국정농단과 연계된 인사 개입에 대해서는,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조직개편 여건을 만든다는 의미가 이상화 씨 승진 여건을 만든다는 의미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히 인사 개입을, 아주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현행법 위반이 분명한데……

○**위원장 김용태** 위원님,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윤경 위원** 이에 대해서 금융위와 또 금감원이 저는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쨌든 은행이 회장 선임과 관련해서 일정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까지 금융위나 금융감독 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알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상 은행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게 실제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회장 자격으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금융감독 당국이 분명히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금융위원장 최종구** 감독원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두 번째, KEB하나금융그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정 계획된 프로세스에 따라서 경영 지배구조에 관한 것의 검사가 들어갔고 채용비리에 관한 것도 검사가 들어갔고요. 그러나 시중에서 감독 당국이 검사나 이런 것 들어갈 때…… 저희들은 그래서 통상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금융이 상당히 빠르게 진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될 수가 있고 인사를 결정하는 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좀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후보가 결정 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본분이 적격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되는 것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

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윤경 위원**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실제 은행직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선임이 완료된 뒤에 적격성 문제에 다시 시비가 걸리면 은행의 신뢰도 하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적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것은 다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적절히 개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요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를, 적절한 타이밍을 놓칠 위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태** 제 위원님, 마이크가 꺼졌으니 추가질의 때……

○**제윤경 위원** 예.

금융위원장님, 아까 그 구분에 대해서 좀……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러면 거래소 한두 개 문제되는 것만 폐쇄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생각은 현행법하에서 이런 과열이나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할 텐데 그중에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거래취급업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가 아마 우선 나올 수가 있을 테고요.

전반적으로 거래소 자체를 전부 문을 닫게 한 다든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입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 김관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방 가상화폐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관계기관 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는 외부로 공표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서 조율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말은 역으로 보면 과거 정부의 여러 대응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긴밀하게 논의되고 또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데 부족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고려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가상통화와 관련해서 일부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이 또 정부 내에서 조율되지 않은 사안들이 바깥으로 표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국무조정실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정제되게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기재부장관 또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이런 분들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규제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충분히 조율하고 이것이 시장에 미칠 반응까지를 고려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든지 간에 거래소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야기시키는 그 근원인데 이 거래소를 투명하게 운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부터 시작해서 또 잘못된 것은 감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거래소에 관한 대책에 관해서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을 보니까 거래소 인가를 전제로 하는 법안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가를 할지 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현재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입장이 선 것은 아니지요,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거래소 인가에는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김관영 위원**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김관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어떤 근거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을 하고 사실 거래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이 전자상거래법이 공정위 소관 법이거든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김관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법을 보니까 현행법 내에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

는 위임 규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에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범위, 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조항 해서 재화의 내용 및 종류, 재화 등의 가격 등을 정하도록 또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9조의2를 보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에 관해서 제대로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근거법이 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에 나와 있는 이 규정에 따른 시행령들을 조속히, 시행령은 상당히 빨리 조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이 부분을 통해서 빨리 단속을 하는 것이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의 정보통신업종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각 지자체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자상거래법상에 근거해서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소의 약관이 공정한지에 대한 조사는 이미 끝나서 조만간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조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상거래법상의 정보통신업종이나, 지금 가상통화 거래하는 기능이 그 업종이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상의 전자통신업종으로 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저희도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해서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영 위원**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업자등록 요건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현재 등록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세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김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자상

거래법상의…… 통상은 이게 전자상거래, 그야말로 홈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여기에 근거해서 등록해 놓고 다른 것을 팔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용태 김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시지요.

○김관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예.

○김관영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현행법 내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빨리 일단 찾아서 대통령령으로 개정하고 이 부분들 시장에 연착륙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정부도 지금 사실…… 거래소에 대한 새로운 규제에 관한 것은 법령에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대책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의 제정과 개정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관영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김성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우선은 한 가지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정부 TF 명칭에서는 디지털화폐라고 했고 또 국회나 기재부나 언론에서는 가상화폐라고 그리고, 금융위에서는 가상통화라고 하고, 법무부에서는 가상증표라고 하고, 청와대에서는 암호화폐라고도 합니다. 어떤 표현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가지가 외국 용어로도 다 다릅니다. 용어가 다 쓰이는데요 정부로서는 가상통화가 화폐적 기능을 아직 수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화폐라는 용어는……

○김성원 위원 그러면 가상통화하고 암호화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어로도 좀 구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이 쓰이는데요.

○김성원 위원 아니, 그러면 청와대에서 암호화

페 이런 표현을 써도 돼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정부는 화폐라는 용어는 가급적 지금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화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김성원 위원 그런데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 암호화폐 이렇게 발표를 해 버리면, 물론 용어로서 다른 표현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국무조정실에서 좀 제대로 해야지…… 사실 봉숭아학당에서 연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잘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정부 부처에서 다 다르게 하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의 역할은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저희는 내부 회의를 하면서 가상화폐는 쓰지 않고 가상통화라는 용어로 부처는 쓰고 있고요.

○김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하든가 통일을 시키든가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결국 모든 국민들이 다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님, 금융위는 한번 살펴보셨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상화폐에 투자든 투기든 해 보신 분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전수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그게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성원 위원 그러면 금융감독원장님, 조사는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자제하라고 권고를 했고요. 그것은 또 법상으로도 저희가……

○김성원 위원 법상으로는 없지만 투자를 자제하라고 해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내부거래의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는 담당 부서가 아닌 경우는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이예요, 그런 게?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저희들이 조사는 안 했고요 자제하라는 명만 내렸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자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자제한다고요?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예.

○**김성원 위원** 그것은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고요.

금융위원장님, 제가 작년 10월 달 국정감사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오락가락하는 이 정책을 지적을 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지 된다고 했는데요. 그때 금융위원장님께서는 답변은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도 400% 가까이 폭등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그동안 금융위는 어떤 실체적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돼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그동안 정부가 한 것으로, 현재 거래에서 일어나는 과열 투기 이런 것을 막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고 입법에 대한 준비도 해 오고 또 입법하기 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꾸준히 강구를 해 왔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요 위원장님, 보십시오. 제가 실제적인 문제점을 하나 얘기를 할게요. 예전의 제2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시지요, 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김성원 위원** 그때 얼마나 큰 혼란을 겪고 했습니까? 지금 그것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김성원 위원** 이게 지금 원화 환급요청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 완전히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금액이 인출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제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인출이 한 일주일 이상 늦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그 원인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안의 처리에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금액도 파악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빗썸의 환급 지연으로 뱅크런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요. 시장 안정화는 우리 금융위원장님께서 자리를 걸고 책임지고 이것 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

○**금융위원장 최종구**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데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그러한 데 대한 입법적인 근거가…… 어디가 해야 되는지조차 그동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행법하에서 필요하다면, 그쪽에 불법행위의 혐의가 짊으면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를 하고 또 거래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태** 죄송합니다. 우리 최운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셔야 되는데……

다음은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열 위원** 순서를 바꾸시는 바람에 김성원 위원의 질문하고 제 질문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죄송합니다.

○**최운열 위원** 서로 알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웃음소리)

농담입니다.

본 위원은 2016년·17년 국정감사 때 아마 기억하실지…… 우리 위원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블록체인 환경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런 사회적인 혼란을 보면서 과연 정부가 그 사이에 뭘 했나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칭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우리 위원님들도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들어 보면 이게 화폐냐 금융상품이냐 재화냐 아직 정의를 못 내리고 있잖아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런데 또 일부 위원님들은 우리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그것 추슬러라…… 그것은

금융상품이나 화폐로 인정하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지금 안 되잖아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최운열 위원** 그래서 국무조정실장님, 정부 내에서 화폐나 통화라는 용어를 안 쓰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래소라고 쓰기 때문에 또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의 책임으로 돌아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용어 정리를 하셔서 전체 정부 내의 컨센서스를 한번 빨리 모으시는 게 좋지 않나, 용어부터.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화폐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암호화폐라든가……

○**최운열 위원** 통화도 쓰지 마세요, 통화도.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가상화폐라는 용어는 안 쓰고 있고요. 저희가 통화라는 용어를 부득불 지금 쓰고 있습니다마는, 영어로 ‘커런시(currency)’라고 하는 영문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완전히 배제하고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씁니다마는 그 분야도 정부가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빨리 정리하셔서 더 이상의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논란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느 기술이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 가지고 사회현상이 일어나고 현행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실정법을 만들 때까지 사회혼란은 계속 일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얘기하던 대로 우리 법의 기본체제를, 열거주의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가 없다. 빨리 포괄주의로 바꾸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최운열 위원** 그리고 어느 대학 교수님이 이 현상을 ‘흙수저의 돈을 뺏어다가 흙수저한테 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저는 흙수저의 돈을 뺏어다가 중국의 큰손들이 다 가져갈 가능성이 많다, 그런 위험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자체적으로 거래를 금지하고 P2P까지 금지를 하다 보니까 아마 위안화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환전해 가지고 여기에서 거래해서

지금 가져가잖아요, 우리가 2014년부터 원·위안화 직거래장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하루 거래량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원·위안화 직거래장에서? 알고 계신분 있어요? 금융위원장님, 알고 계세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분리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의 20억 달러랍니다, 매일.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돈이 아마 가상증표인지 거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또 비트코인 채굴의 81%가 중국이랍니다. 그러면 저게 완전히 큰손인데 큰손이 자기 나라에서는 금지되니까 한국에 와서 지금 장난쳐 가지고 나중에 피해자는 한국인만 남을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런 외환시장의 문제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최운열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문제로 단순하게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법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인가를 한번 검토하시고.

또 우리 국무조정실장님이 몇 번 강조하셨습니까 다만 요즘 각종 세미나에서 이것을 규제를 하면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다 죽는다는 식의 엄포를 놓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세요, 우리 국민한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하고 가상통화는 이 쥬이 아닙니다.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갖다가 금융적 측면에서 화폐라고 하는, 말하자면 화폐로 시도하는 하나의 응용분야이고,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블록체인 기반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블록체인 기술의 극히 일부를 여기에 응용한 것일 뿐이잖아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최운열 위원** 이것이 이것은 아니잖아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최운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들한테 잘 설명하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부에서 과장되게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다 막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저는 추가시간도 안 주시……

○**위원장 김용태** 예, 마무리……

○**최운열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대응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이것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블록체인 기반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에도 금년도에 한 100억 정도의 R&D 자금이 들어가 있고요. 이 기반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의류라든가 물류, 보안, 서비스, 환경, 우편 여러 가지 분야에 저희는 응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상화폐와는 별도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 어느 분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모태펀드라든지 중소기업부에서 지금 거래소 설립하는 과정에 돈이 지출됐잖아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최운열 위원** 이것 정부가 지금 이 거래소를 육성하는 데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포지션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님,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하고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투자는 별개라고 봐야 되지만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해당 부처에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김선동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참 짚어봐야 될 게 많은데, 지금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 이 총론적 대응부터 저는 근본적으로 정말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현안보고한 내용들 쪽 살펴보면 전부 다 규제, 물론 블록체인에 대한 그런 기반기술을 육성하겠다고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전부 다 보면 문제점, 규제, 부작용, 보안사고, 검경 엄정 대처, 신규 가입 즉각 중단 등속의 완전히 규제 일변도로 돼 있는데 이런 사고가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 정부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부터 제대로 정립하고 있는지? 제가 사실 오늘 개별적으로 조정실장님,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다 지금 세세하게 어느 정도 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벌써 드러난 것이 하루 거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이게 투매현상이 발생했을 때 거래능력이 되고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확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총체적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고 아직도 갈팡질팡,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지금 대책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안절부절하면서 내세우는 정치적 대중요법뿐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기술기반이 될 겁니다. 공공 차원의 신뢰와 투명성 그리고 보안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공공기제로서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잘돼야 의료도 잘되고 복지도 잘되고 국민들의 조세 형평, 먹거리의 안전성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기술 재편의 기반이 될 중요한 사안을 두고서 규제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과거에 이메일을 무료로, 이메일 지금은 다 무료로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 당시에 이메일을 무료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신산업이 마비된다, 해체되게 돼 있다 이러면서 유료로 해야 된다는 그런 관료들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그다음에 가상화폐에 대한 이 정부의 인식 수준이 바로 그 당시에 이메일 규제해야 된다, 유료로 해야 된다는 발상의 수준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개탄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월 11일 날 ‘부처 간에 조율을 거쳐서 거래소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부처 간 조율을 거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청와대는 막바로 ‘결정된 사안 아니다’라고 발표했고, 대통령께서 ‘부처 간에 중요한 것 하려고 그러면 조율을 거쳐서 해라’, 대통

렇게서 이 중요한 문제를 두고서 당신께서는 정작 한 발 빠시면서 빠져나가셨습니다.

저는 정말 개탄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왜 과기정통부는 목소리를 안 냅니까? 오늘도 답변할 때 보면 금융위, 금감원, 법무부 이런 얘기만 나오지 과기정통부의 목소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투기 과열됐다고 그래서, 부동산경기 과열됐다고 그래서 강남의 공인중개사 업소들 다 폐쇄해라 이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 안 되는 겁니다. 강남에 문제가 있다고 강남의 공인중개사들 문 닫게 한다고 해서 경기도, 강원도의 부동산 거래 공인중개사들 영업 안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규제하고 거래소 폐쇄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P2P 거래 막지도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규제하면 이 자금이 일본으로 스웨덴으로 스위스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으로 다 흘러갈 겁니다. 이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정부가 저는 적폐청산이나 이런 것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030 청년들 그다음에 셀러리맨들 이분들이, 이 계층들이 시대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계층입니다. 이분들이 블록체인에 열광하고 그다음에 가상화폐에 열광하고 이러는 데는 미래 흐름이 그리로 갈 것이라는 시대정신을 이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김용태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선동 위원 1분만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다 사상해 놓고 이렇게 규제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 흐름,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는지? 이러다가 이메일 규제하는 그런 반시대적 흐름과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저는 오늘의 정무위원회에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 다 합쳐서 연석회의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여당 위원님들 오늘 이렇게 이 문제 뜨겁게 생각하시고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런 정무위원회 회의 개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늦었습니다. 빨리 국회 차원에서 연석회의하고.

정부 차원에서 용어 통일조차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빨리 제대로 점검하셔서, 회의 몇 번하고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 터지게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태 국무조정실장이 대표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가 대책에 잘 참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정부도 지금 이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비정상적으로 투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든가 또는 사회병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단속할 것은 단속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관계부처 차관회의할 때 누차 얘기를 했고,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 2018년도에 하고자 하는 육성사업들도 제기하는 등 저희는 충분히 의견 수렴해 가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조율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더 참고하고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실장님 말씀 좋고요. 그런데 거래소를 폐쇄한다라는 것이 어떤 시장의 합의가 있는 것인지 그것 깊숙이 생각하시고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될 문제라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금감원장님, 내부거래 직원 문제 이런 부분들은, 가장 도덕적으로 투명해야 될 기관이 금감원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내부 조사하시고 어물어물하지 말고 이런 것은 검찰 조사 바로 넘기십시오.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합니다.

○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운열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예.

○**최운열 위원** 여당 위원들이 정무위 소집 자체에 부정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우리도 보다 일찍 이런 기회 갖기를 원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각 당 간사님들과 상의하셔서 절차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학영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저희들이 이상임위 자체를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밝혔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향후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안 자체가 급박한 게 추가가 되었고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여론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각 당에 협의하는 과정에 충분치 못했다는 것은 제가 아까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인정한다는 말씀드렸고요. 다만 급박한 상황에서 늦출 수 없었다는 것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위원** 국무조정실장님하고 금융위원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거품, 불법, 사기, 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시장에 신뢰를 줘서 정상적인 거래는 이루어지게 하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결제수단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전면적인 폐쇄냐 아니면…… 혹은 폐쇄 옵션이 살아 있다 이런 얘기만 하게 되니까 실제로 투기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래소 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점수나 등급을 매기고, 정부가 직접 평가를 하든 신용평가회사가 평가를 하든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해야 한다, 그게 적절치 못한 그런

거래소는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시장의 소비자들이, 수요자들이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관계 당국에 보고하는 법적 의무를 갖다가 부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의 거래소는 사실 거래추이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까맣습니다. 소비자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는 불법투기화되고 있는 거래시장을 통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단순히 ISMS 인증을 해야 한다 이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실제로 거래소를 어떻게 어떠한 틀거리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갖고 준비해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거래소의 가치변동제한폭을 설정해야 되고, 인가받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화폐의 환전 한도랄지 출금 한도랄지 이런 것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거래는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대답해 보시지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대책을 세우면서 법무부 쪽에서는 거래소를 인정하지 않겠다, 극단적으로 폐쇄하는 쪽의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요건을 갖추고 할 수 있는 거래소는 그렇게 지금 의무를 부과하고……

○**민병두 위원** 짧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인가든 뭘 하자 했는데 요 그 내용이 극과 극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로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두 위원** 그러니까 사법 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불법, 사기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또 금융 당국 입장에서서는 화폐냐 아니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부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그 가운데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종합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곳이 국무조정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는 막되 거래는 인정하자, 그리고 이것이 결제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서 산업적으로는 발전시키도록 하자 이런 큰 원칙은 가닥을 잡아

줘야 한다 하는 생각인 겁니다.

자, 이것 세금은 어떻게 매길 거예요? 결국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매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원칙이 없으니까 지금 결국 세금 문제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것 아니에요?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가닥이 잡혀 있습니까? 부가세를 매길 겁니까, 소득세를 매길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서로 연결돼 있는 문제인데요 기재부가 그 문제를 연결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민병두 **위원** 그러니까 독일처럼 이것을 사적화폐로 보느냐, 일본처럼 지불수단으로 보느냐, 미국처럼 상품으로 보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서 있지 않지 때문에 지금 부처마다 다르고 가닥이 다 안 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한 큰 3원칙, 투기는 막자, 거래는 보장하자, 그다음에 산업적 발전방안을 찾자 이 생각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결제수단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 사실 저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결제수단으로써, 지불수단으로써 많이 통용된다고 한다면 또 그런 통용이 보편화된다고 한다면, 특히 한국형 코인이 그런 면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블록체인하고 가상화폐가 별개지요. 물론 별개지요. 그러나 연결되어 있지요. 연결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가상화폐가 사실은 블록체인망을 갖다가 확산시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예, 정리해 주십시오.

○민병두 **위원** 확산시키고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산시킨 것만큼, 사실 정부가 새로 개발하고자 하는 무슨 공공 DB랄지 혹은 여러 가지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을 실제로 산업적 측면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에 가상화폐가 기여하고 있는 긍정적인 점도 있는 거란 말이지요.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아까부터 자꾸 계속 분리된 것이다, 두 가지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갖고

과연 정부가 실제적인 진흥정책을 취할 수 있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인 겁니다.

대답하시지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제가 두 문제는 별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 다마는 지금 가상통화라는 것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가장 잘 적용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전혀 별개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의 입장을 묻기도 무섭습니다, 또 어떤 후폭풍이 불지 몰라서. 결국 지금 국무조정실장님 딱 답변한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직 결정된 것 없고 논의 중이고 결정하면 얘기하겠다고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발언들이 나와서 결국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법무부에서 작성한 자료라고 하는데요 ‘가상통화 거래 금지 검토 필요성’이라는 문건이 있어서 이게 기사가 났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은 가상통화의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해서 국민들이 시장에서 빠져나오도록 한 뒤에 거래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자라는 게 주요 내용이라는 겁니다.

수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자꾸 경고로 알리고 가격을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한 다음에 거래를 금지시키자 이게 법무부에서 만든, 이 내용이 법무부장관에게 당연히 주입이 됐겠지요. 법무부장관은 질문하니까 전혀 다른 부처와는 조율되지 않은 본인의 생각, 그러니까 본인의 부처의 생각만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혼란을 만들어 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무조정실장님이 창구를 단일화하시고 다른 분들은 최대한 말씀을 아끼시도록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금융위가 주도해서 TF를 구성한 게 2016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11월부터,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 7월에 금융위가 주관하던 TF를 확대하면서 법무부가 들어왔고 11월부터 법무부가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왔는데, 작년에 금융위가 처음 주도적으로 할 때 이미 거래소들과 함께 자율규제안 만드는 걸로 추진을 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저 그 안이…… 말씀하신 대로 2016년 11월에 TF 구성됐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있었던 자세한 논의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자율규제안을 만들기로 했었고, 그 자율규제안 내용 중의 하나가 실명거래계좌로 하게 하자라고 했고 그것을 2018년, 올해 1월부터 시작하자 그러면서 2~3개월간 기존의 가상계좌에 대해서 실명화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고 신규 계좌는 실명화된 계좌만 만들어 주자라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서 작년 12월에 자율규제안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물론 이 자율규제안은 블록체인 그 협회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거기에 우리나라 주요 거래소들이 다 동참하겠다고 이미 밝힌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 같이 논의했다가 왜 지금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서 이렇게 혼란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 진단을 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은행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는데 거래소에 대한 조사는 안 하고 있다. 왜? 권한이 없으니까. 누가 해야 되냐? 아까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상거래법 통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1년 동안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있다가,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거래소에 대한 감독기능을 누가 할 수 있는지를 빨리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보완, 시행령 같은 걸 마련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폐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게, 이미 해외로 다 옮겨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장차관님들은 그런 사이트 아예 들어가 보지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거래소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요 또 다 해외거래소로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2위라고 하는 바이낸스, 홍콩에 있는 거지요. 한국어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

서 어떻게 하면 그것 다 이체해 가지고 또 거기서 거래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상황까지 온 지경에 이것을 폐쇄하겠다고 하면 해외거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막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도 제대로 된 문제 진단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원장님, 특히나 이것을 금융거래로 보느냐 안 보느냐 때문에 곤혹스러우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래에 대한 어떤 룰에 대한 세팅이나 이런 부분은 금융 당국이 가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부분들을 좀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용태** 마무해 주십시오.

○**채이배 위원** 예.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각각 입장이랑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김관영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전자상거래법상의 조사 관련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법무부에서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강한 의견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실행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또 정부 관계부처 차관회의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소비자 문제도 있고 외국과의 거래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해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주신 말씀대로 좀 더 감안해서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이배 위원** 거래소 조사……

○**금융위원장 최종구** 2016년 11월에 금융위 내에 TF가 설치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때만 해도 시장이 그렇지 않았습디다.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고 해서 당시로서 금융위는 상당히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상통화의 P2P 거래에 대한 자금결제 측면에서 활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했고, 특히 그때가 탄핵으로 아주 어수선한 국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금융위는 상당히 일찍 이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가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가, 투기가 과열됐던 작년 중반기부터 이 규제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2017년 4월에 거래소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투기가 과열되었다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이 늦었다고 보실 수도 있겠으나 어느 나라, 대부분의 나라가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착수했다는 점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는 현재 은행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간접적인 규제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대한 조사는 현재 근거법이 없어서 저희로서는 못 합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특정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이 거래…… 저희는 사실 거래소라는 말도 좀 쓰는 게 꺼려집니다. 취급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거래가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측면이기는 합니다만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채 위원님, 답변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추가질의 때 해 주시고요.

다음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 가상통화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도 높고, 누가 보더라도 위험을 초래할 만한 투기적인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또 불법거래의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염려가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의 진보와 세계의 변화 또 어쩌면 새로운 가치창조 이런 것에 대한 기대도 같이 녹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장뿐 아니라 또 미래의 투자자들이라든가 미래에 참여할 사람들에 대한 위험도 사전에 막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투자한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이게 연착륙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손실에 대해 가지고 거의 공포 수준에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분들만 생각을 해서 이것의 과열을 놔둬다가는 미래에 엄청난 피해를 양산할 수도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랑 관련된 스탠더드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의회에서 이것과 관련된 공청회가 이제 소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된 기회와 손실, 피해에 대한 부분을 면면하게 고려해 주셔서 신속하게 이것과 관련된 스탠더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방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특히 관련해 가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법을 정액 방법에서 정률 방법으로 해서 소규모로 결제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카드수수료랑 관련해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고려는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작은 소상공인들입니다. 지금 현재 카드수수료랑 관련해 불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모바일 페이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드수수료랑 관련해서 모바일 페이의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될 여지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모바일 페이를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인 카드수수료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가까이 비싼 수수료를 지금 현재 지불하고 있습니다.

페이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인데, 서비스 자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금융위에서 마련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바일 페이

시장은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에도 점차 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정무위에서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된 정무위원회의 의견서를 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장님한테 질의하기에는 직접 이해당사자니까 금융위원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 언급을 했지요. 김동연 기재부장관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12월 정무위에서 금감원 예·결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예·결산 국회에 보고하고 분담금관리위원회도 신설하겠다. 이전보다 더 엄격한 추가 통제를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현재 금융위와 감사원, 국회의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정무위원회의 의견서 안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공공기관 지정을 통한 추가 통제는 불필요한 행정낭비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금융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그리고 회의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밝혀 주신 정무위원회 전체 의견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합니다.

○**박찬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명분이 취업비리와 방만경영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조금 더 떨어뜨려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취업비리·방만경영 문제는 금감원으로서나 감독을 맡고 있는 저희 금융위로서는 상당히 책임이 있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단속, 자체적인 정화 노력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진행되는 혼란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30여 년 전에 이메일이라는 서비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게 우편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정사업본부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가상통화, 가상화폐라고 하니 이게 돈, 금융이나 되는 것처럼 해서 개념 혼란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국무조정실장님, 향후 계획을 보면 그냥 ‘거래자의 주의를 지속 환기하고, 그동안 마련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육성하겠다’…… 지금 죽 나열하신 대책을 보면 그동안 예상되었거나 나타난 문제에 대한 대응요법으로, 따라잡기로 계속 가고 있어요. 또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또 따라잡을 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혼란을 반복하실 겁니까? 급기야는 금감원 직원의 내부거래까지 나타나는 이 혼란이 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저는 나타난 이 현상은 전형적인 관료주의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료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국정관리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첫째, 처음에 가상화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주무부처가 아니라고, 뜨거운 감자라고 미루었어요. 그런 것 인정 안 하십니까? 국무조정실도 가만히 있었지요, 과기부도 가만히 있었지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도 우리 일 아니라고 했지요.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법무부가 총대를 댔어요. 전형적인 관료적인 어프로치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감자라고 다 회피하고 아니라고 하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는 또 면피하는 방법이 뭐냐? 초강수를 두어 가지고 아예 뿌리째 뽑아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터져도 ‘우리 그때 할 만큼 했다’라는 면피가 되거든요. 제가 30여 년간 관찰해 온 관료조직의 아주 전형적인 관료주의가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거래소를 도박장으로 규정해서 불법화하겠다는 법무부의 발표는 국제 언론에 얼마나 우습게 보도가 됐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왜 도박장으로 규정을 합니까? 그러다가 또 투자자들이 반발하니까 ‘아,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후퇴

해 가지고 지금에 이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꼬끼리가 방에 들어왔어요. 이것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기술과 시장의 진화를 정부 정책과 제도가 못 따라가는 전형적인 사례예요.

한 20여 년 전에 방송위원회, 통신위원회가 따로 있을 때……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동통신사가 이것으로 방송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방송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케이블티비 방송이 인터넷을 하겠다고 통신위원회가 그것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이 두 위원회의 알력을 마무리하는 데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소모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진행되는 이것도 저는 전형적인 관료 간의 무책임과 책임 미루기 또는 과잉반응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종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유방임 상태가 해당이 아닌 것은 저도 동의하고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처럼 따라잡기식 대응, 즉 대증요법도 해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것을 금융투자상품의 하나로 포섭해서 시세조종에 대한 불법행위라든가 투자자 보호장치라든가 거래소의 요건을 규정한다든가 또는 필요하다면 과세를 한다든가 이렇게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컴퓨터파일 형태의 무형재산이고 투자상품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선물 옵션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것은 공정위가 주관하는 전자상거래로 보기도 이상하고 전자금융거래로 보기도 이상하고,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금융상품으로 흡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무조정실장님과 금융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아까 관료주의에 관해서 뼈아프게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도 관료입니다마는 주어진 여건에서 지금과 같이 책임 미루기 이런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과 달리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아까 도박 관련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

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 회사에 대해서 현재 도박개장 혐의 관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상통화 거래 전체에 대해서 도박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요 그 모 회사의 마진거래라는 형태가 거의 도박과 유사하다는 혐의를 잡고 그것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고 자시법 체계로 들어와야 되겠다, 전자상거래법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정부부처 내에서 논의할 때도 지금 이러한 갑론을박이 있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금융위 차원에서는 이것을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료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석 위원**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상품으로 흡수해서 규제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래규제가 신기술 개발의 억제 아니냐라는 취지로 처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금 거래소 자체에 대한 규제가 과연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을 억제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거래를 중개하는 취급업자들의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증권거래소와 같은 매매거래 중개 플랫폼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블록체인 기술 발달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다음 질의 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채이배 위원이 지적하셨는데요, 정부 당국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해야 할 겁니다.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정부 당국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정되지 않았으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번 혼란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그 자리가 그냥 기자들의 통상적인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신년

기자간담회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부처 간에 이견 전혀 없다, 그래서 법무부가 행동에 옮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준 겁니다.

오늘도 아까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 부처 간에 의견을 조율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해법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결코 안 된다, 한 부처에서 절대 반대다…… 바로 이런 것이 또다시 이견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시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분명히 인식하시고 의사결정을 서두르기는 하되 최종 조율된 의견만이 국민과 시장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욱 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우왕좌왕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지요? 우왕좌왕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 제가 다 이야기 안 해도 다른 분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국무조정실에서 ‘거래소 폐쇄 포함 모든 수단 열고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하고 죽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국무조정실하고 그다음 법무부장관이 거래소 폐쇄 발언하고 난 다음부터 엄청나게, 57% 이렇게 떨어지고, 김동연 장관 하고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왕좌왕한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왕좌왕 안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 아무 대책이 없어요. 국무조정실이 만든 보고 보면 이제까지 한 것이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지만 실제로 대처한다고 말만 했지 한 것도 없었고, 과열에 대한 대응 이런 것 있고 향후계획이라고 해 봐야 거래자의 주의를 지속 환기하겠다 이것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까 여러 분들이, 민병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김종석 위원님도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아까 실무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거래소를 허가하는 것이 지금 현재 법으로 써는 특별히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법 개정이 안 되는 한 불가능하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지금은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욱 위원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이게 개념 정리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정태욱 위원 그런데 입법을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국무조정실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쬐은, 이게 벌써 작년 12월부터 문제가 됐다면 근 한 달 반 정도 됐으면 지금쬐은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입장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야당이라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언급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을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이 정책을 해요. ‘정부 간 혼선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게 다 청와대가 주관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전혀 안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정부가 첫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까지 지난 한 달 반 이상을 우왕좌왕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인데 지금 현재도 그 우왕좌왕하는 것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소를 허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허가를 안 한다고 하면 그래도 비교적 이야기가 쉬운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법령을 만들겠다 그것도 의원입법으로 할지 아니면 정부입법으로 할지, 방향은 어디로 할지 거기에 대해서 정해진 것도 없고, 세금도 아까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하는지도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요. 이 향후계획 보면서 정말 참 너무 부실하고 책임 없는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주관이 되든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든 분명히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막연하게 ‘검토한다’, 김동연 부총리 이야기하셨는데 거래소에서 어떻게 할 거냐,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비트

코인에 대한 개념 정립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화폐로 볼 거냐 그냥 선물로 볼 거냐 물건으로 볼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개념 정립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오후에라도 앉아 가지고 딱 개념 정립을 하고 지금부터 이 방향으로 간다 이래야 시장한테 분명한 방향이 주어지지 이걸 정말 굉장히 부적절하게 대응했고 앞으로 그것이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 그 정도 제가 지적하고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 하나만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이따해 주시고.

금융위원장님한테 좀 여쭙볼 것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금융감독원한테 맡겨놓은 것 같은데 금융위원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최종구**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찬대 위원님 말씀 그리고 정무위원장이 모두에 하신 말씀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정무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의견을 표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가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의견을 안 듣고 결정하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무리 없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정태욱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거래소 관계, 입법 관계, 과세 관계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정말 남아 있는 가장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가 사실은 맞물려 있는 사안입니다. 거래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입법을 어떻게, 제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하고 과세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한 이 세 가지는 저는 같이 연계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남은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기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하여튼 정부가 최대한 조속히 입장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 국조실장께 질의할게요.

가상화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도 하시고 또 국조실에서 대책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거래 금지 내지 거래소 폐쇄를 하지 않는 거라면 지금 국조실에서 보고한 이런 대책 이외에 방법이 있겠느냐? 물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향후 거래소를 하게 됐을 때 과세 문제 포함해서 죽 해 나가겠지만 그건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거고 폐쇄를 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가상통화 관련해서 불법행위에 대처하고 또 기반기술 육성·지원 죽 하는데, 현재 거래 금지 내지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했어?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이 없는 한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정부가 기존 법령 내에서 불법행위가 있는 것이 적발되고 또는 시세조작이라든가 그렇게 위법한 사항이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폐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상통화 거래소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은 법이 필요하지만 개별 거래소에 대해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도 저는 폐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하는 조치야 당연한 거고, 일반적인 거래소 폐쇄나 거래 정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돼 있거나 아니면 그 부분의 논의의 성숙도, 논의의 정도가 어디까지 가 있느냐 이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그것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법무부의 법이 지금 그러한 불법행위와 관계없이도 가상통화를 중개하는 거래소 자체를 금지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법 제정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법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님, 그리고 그때 사실 우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과열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거래가 계속 지속되고 부작용을 기존 시스템으로 막는 게 어렵다면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것도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려면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은 그러한 취지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 간에 조율이 안 됐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니다.

○**전해철 위원** 이런 거겠지요. 모든 가능성은 다 볼 수가 있는데 그 가능성을 검토하는 정도가 문제겠지요. 물론 그 자체 이야기도 굉장히 심각하고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제가 질의했던 것은 그 논의의 정도가 어디까지나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다양한 의견이 정부 입장으로 하나로 조율돼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래소 폐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처회의를 왜 하겠습니까, 국조실장님? 그런 여러 의견을 조정하기 힘들니까 국조실에서 조정하려고 회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처의 다양한 의견이 왔을 때 현 국면에서는 우리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또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 답안이고. 그게 명쾌한 거거든요.

아무튼 제 주문사항은 지금 나머지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대책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래 금지, 거래소 폐쇄 등에 대해서는 부처가 완벽하게 조정·통합, 단일하게 의견을 모아야 될 뿐만이 아니고 그 발표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냥 어느 부처에서 기자분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나갔다…… 이런 게 어떻게 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중에 한 의견을 그 부처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러려면 뭐 하러 국조실에서 그런 걸 해요, 각자 부처가 다 자기 입장 이야기하지?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논의 단계 그리고 논의의 결과는 아주 단일한 목소리로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 말씀을 드리고요.

금감원장께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대답을 하시는데, 일단은 왜 그렇게 공공기관 지정이 나왔다고 생각하시지요? 왜 이런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최근에 논의가 되는 것은 저희 금감원이 감사원 평가에 있어서 채용비리라든지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발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거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2009년 1월에 한 번 지정해제된 이후로 전혀 이야기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기재부

에서 2017년 말에 한 500곳 정도를 심사하면서, 기준을 봤는데…… 단순하게 채용비리 그런 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잘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좀 더 잘 보시지요.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그런데 발단이 그것이 좀 통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통제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전해철 위원** 저희들이 국정감사 때나 죽 이야기했지만 원초적으로 금감원이 이와 같이 자체적으로 혁신하지 못하면 외부에 의해서 하게 되는 아주 슬픈 처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성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본질이 아닌데…… 그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게 나왔던 것은 저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금융위원장께서도 좀 더 단호하게 하시고, 급기야 지금 국회 정무위까지 의견을 피력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응하시고 또 당당하게 대응하시고. 아닌 부분은 아니지만 크게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잘 대응하시고 필요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하여튼 당사자인 금융감독원장도 마찬가지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제대로 된 통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 지정이 절대 답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우리 정무위원회도 모았고 금융위원회 입장도 그렇다는 걸 분명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독원의 일이 아니라 제 일로 알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다음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먼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관련해서 2007년 1월에 갑자기 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기관으로 들어갔었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박선숙 위원** 그런데 2009년 1월에 지정해제를

할 때는 법 개정을 안 한 채로 그냥 지정해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박선숙 위원** 저는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2007년 이전까지의 법에서 KBS, EBS, 한국은행, 금감원 등에 관해서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기관으로 분류해 놨었는데 금감원만 거기에서 빼서, 법조문에서 빼서 공공기관으로 일시 지정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정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법 개정으로 명료하게 하지 않은 채로 이것이 기재부가 임의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 이 상태로 지금 계속 온 것이 문제라고 보고 저는 이 논의가 나온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원칙의 문제이고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독립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관으로서 법에 명료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통화,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용어의 통일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어쨌든 용어를 좀 통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어떤 면에서는 풍선효과가 좀 있는,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국내적 여러 여건들과 결합되어서 급격하게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어서 더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단 가상통화를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지 않겠다라는 그 원칙 때문에 부분적인 조치들을 검토하다가 오히려 거꾸로 ‘아, 이것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구나’라는 시그널을 준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의도한 것과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대응을 앞으로 어떻게 종합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역할 또 관련 부처의 숙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는 분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최종구 위원장님께서 ‘구분할 수 있다’, 저는 구분해 달라고 지난번 공청회에서 요청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내용이 있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지원에 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에서도 1월 달에도 발표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앞서 상품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최종구 위원장께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시카고상품거래소는 지난해 12월에 비트코인의 선물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용어의 통일하고 다 관련된 문제입니다. 1400여 개의 가상통화 가운데에서 비트코인을 선물로서 거래소에서 거래하게 하고 또 그것이 다시 뉴욕증권거래소에서도 관련 상품의 출시를 지금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접근이 오히려 이것이 화폐인가 아닌가라는 논쟁보다는 훨씬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400개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는 선물거래의 대상으로서, 상품으로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점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G20에서 본격적으로 규제에 관한 논의가 좀 더 있을지 모른다고, 있을 것 같다고 얘기되는데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비트코인 채굴 전력수요가 전 세계 전력수요의 0.6%, 2025년에는 세계 전기자동차의 전력수요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전 세계 경제에서의 생산성에 관한 문제하고 굉장히 관련돼 있다고 보고 중국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물론 거기는 국가주의적인 경제체제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면밀히, 채굴금지까지도 검토하지 않습니다까?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하여간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화폐금융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기 어렵다, 미래의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아까 정부가 종합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와 일관되고 조율된 목소리가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품 관련은 아마 금융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고요.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G20에서도 정식으로 어젠다화해 가지고 아마 국제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

고요.

○**금융위원장 최중구** 시카고 상품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일반 상품 커마디티(commodity)로 분류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화폐로 보지는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하여튼 규제체계를 마련할 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좋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중구** 공공기관 지정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감독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위원회 문제라고 보고 기획재정부와 잘 상의해서 부처 간의 다툼이라는 오해가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박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기관 운영법에 보면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어떤 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을 포함해서 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데까지도 매년 이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금년에 이게 지정이 안 되고 가더라도 내년에 또 그럴 겁니다. 그때 또 금감원은 금감원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위원님들 또 걱정하시고 그게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 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정되는 게 맞는지 지정 안 되는 것이 맞는지 문제를 떠나서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적으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양 부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입법 준비하시는 것 차질 없이 진행하셔서 이 논란이 차제에는 전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게 곧 법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수시로 바뀌고 모호성에 집착해 있다고 하면 그 정부를 믿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문재인 정부는 좀 믿을 만하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문재인 정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촛불 정신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이 촛불 정

신이 어디 가 있는지 전혀 안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합니다.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정부보다도? ‘격조 있는 정책 결정 또 원만하고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참 훌륭한 결정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나라가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텐데 오히려 다른 정부에 비해서 혼란만 더 가중시키고, 이랬다저랬다 저랬다이랬다 하는 이런 것만 계속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면 결국 이 정부는 결코 전 정부와의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홍남기 실장님, 청와대가 요새 국민청원 코너를 만들어 놓으니까 10만, 20만, 30만 이렇게 전부 다 청와대에 청원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청와대가 국민과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나쁘다고 제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와서 말씀하신다는 게 ‘아이스킴은 23위, 25위쯤 이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우리하고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4년 동안 피땀 흘려서 준비한 젊은이들에게 이 정부가 내세운 슬로건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정말로 믿고 또 믿었는데 올림픽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어찌고저찌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혼란과 함께 더욱 가중되어서 정말 요즘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주변 분들이, 장관을 비롯해서 청와대 수석들이나 실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이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너무 많이 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수업 금지했다가 ‘아니다’, 또다시 ‘다음 몇 월 달까지 유예하겠다’……

국무조정실에서 이런 관계부처 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나와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 돼요. 이것 좀 심하지 않아요? 국민들 요즘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장의 목소리 들어 보시나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김한표 위원** 5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 하기가 너무 짧아서……

이번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도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건 언론에 계속 나왔잖아요? 이게 불법화폐면 불법화폐라든지, 아니면 상품이면 상품이라든지 개념 정리부터 정부에서 빨리해 주었으면 이런 혼란이 덜할 것 아니에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응도 잘 못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하고,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금융기관 지정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금융위 설치법에 관해서 개정 발의를 해 가지고, ‘예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자’, 상임위 통과해 가지고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우리의 의견이 이렇게 다 아침에 정리되어 가지고 위원장님과 3당 간사들이 협의해서 건의문을 드렸는데……

○위원장 김용태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한표 위원 이 건의를 잘 받아 가지고 정말 이런 부분도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잘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금융위 산하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들이 몇 개나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금융위원장님 혹시 아세요, 몇 개나 있는지?

○금융위원장 최종구 지금 대부분은 공공기관 중에 기타공공기관이거나 공기업이거나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러면 왜 금융감독원을 지금까지 공공기관으로 지정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은 ‘이것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야 될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로 명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홍보도 부족했고 설득력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최종구 지정되어서 곤란한 사유는 아까 처음에 정무위원회 전체 의견서에 적시된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획재정부와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홍보할 사항은 아니어서

덜 알려진 면이 있습니다. 관련 부처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먼저 국무조정실장과 잘 의논하세요. 관련 부처와 여러 가지 서로 엇박자 나는 일이 없도록 국무조정실장이 딱 중심을 잡고 한번 잘해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최근에 좀 정책이 조율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정책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2시간 반 남짓 현안이 되고 있는 가상통화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관련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없으면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이학영 위원, 채이배 위원, 박선숙 위원, 유의동 위원, 박찬대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차 모든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정부의 발언 한마디, 각 부처 수장의 발언 한마디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것이 각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준거가 된다는 점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혼란도 본인들이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각 부처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인이 나왔고, 오늘도 참으로 우려스러웠던 것이 이미 상당 부분 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라는 식의 의견이 지금 노출되는 것 같아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마지막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정부는 신중하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안보고 자료 준비와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홍식 금융감독원장, 양충모 기획재정부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정무위원회 의견을 담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관련한 저희 정무위의 집약된 의견은 최종적으로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국회의장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김관영	김선동	김성원	김용태
김종석	김한표	민병두	박선숙
박찬대	유의동	이학영	전해철
정재호	정태욱	제윤경	지상욱
채이배	최운열		

○청가 위원(4인)

김영주	박용진	심상정	이진복
-----	-----	-----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전문위원	정운경
전문위원	오창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감독원장	최홍식
기획재정부공정정책국장	양충모